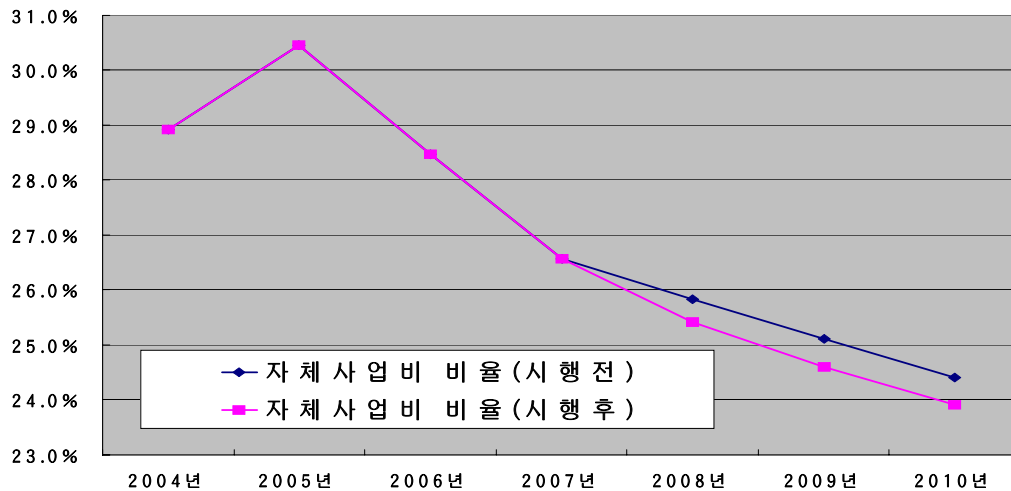


<자체사업비 비율 추이>



Ⅲ. 복지재정의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지방재정의 현황진단과 복지수요 전망에서도 나타나듯이 앞으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리라 예견된다. 특히, 고정적 경비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공급주체인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증가의 담보가 없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자치단체로서 복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충족을 위한 대응전략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적 대응전략

1) 종합부동산세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일반재원이므로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다.³⁾

3) '06년 종합부동산세(17,179억원) = 세수감소분(8,409억원) + 균형재원(8,770억원)

'07년 종합부동산세 추계(28,814억원) = 세수감소분(11,516억원) + 균형재원(17,298억원)